Weekly

공감

2009 08.12
No.24(통권 125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머타임제는 선진국 도약 발판

중점기획 대학 학자금 취업 후 벌어서 갚는다

귀화인 첫 공기업 CEO,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국민이 결정한다
정책 프로슈머 시대
〈Prosumer〉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격 도입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생기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졸업 후 소득이 있어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 그 전에는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최장 25년에 걸쳐 갚아나갑니다.
■ 이제 등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것입니다!

www.mest.go.kr

▶ **대출대상**
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 4,839만원 이하인 가정(전체 국민의 70%)의 대학생 전원

▶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보조)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취업 후 갚는 '등록금 대출' 혁명 원활한 상환체계 만들겠습니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일정 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재학 중에는 이자도 부담하지 않다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ICL제도 도입'은 단순히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신념이 없이는 도입하기 힘든 결단으로, 서민 · 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돼온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닌다.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둘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 휘는 일은 없어진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 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2009년 6월 현재 1만3천8백4명에 이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부모의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본인 소득 발생시 상환하게 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 확충과 원활한 상환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한국장학재단도 정부의 결단과 노력에 부응해 기존 학자금 대출 업무 수행과 별도로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발행하고, 더불어 민간 및 법인으로부터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선진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단순한 학자금 지원기관의 역할을 넘어 학생들이 섬김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8.12_No.24(통권 125호)

국민이 편한 세상 생활공감 오케이!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생활 구석구석을 보듬는 촘촘한 정책,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국민의 생활 속 지혜를 반영한 생활공감정책과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획특집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46

50

발행일 2009.8.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학 등록금 걱정 마세요"

명품 복합도시 새만금
아시아의 베니스를 꿈꾸다

●● 〈Weekly 공감〉 23호(8월 5일자) '포커스- 취업 후 벌어서 갚는 학자금 안심대출 시행' 기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댓글을 소개합니다.

"현행 대출제도는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말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의 웃음이 가득할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길 기대해본다."_ lee2b2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내려야 하는 게 선결과제가 아닐까 싶다."_ 전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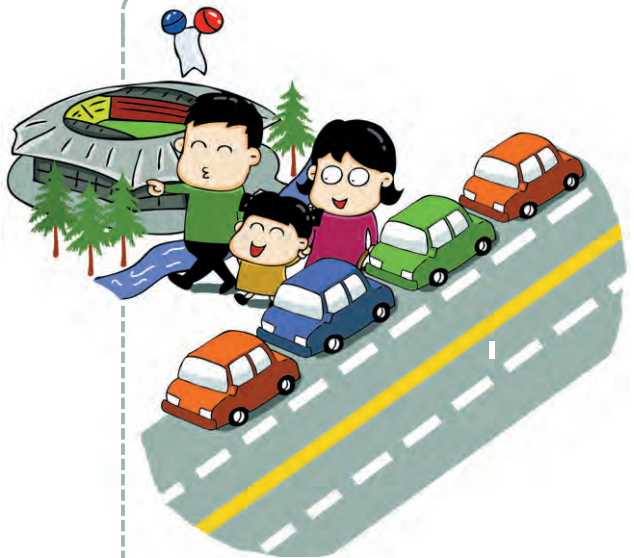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보다는 직업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학을 안 가더라도 기술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 대통령도 한 마이스터고를 방문해 이런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학생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니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_ 마음을 열고서

●● 〈Weekly 공감〉 23호 '중점기획-동북아 경제 허브로 거듭나는 새만금' 기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축하와 기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과 위주의 정책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을 고려하고 한국의 정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_ 착한 이

●● 〈Weekly 공감〉 22호에 실린 이주호 교육기술과학부 제1차관 인터뷰에 대해 한 독자가 올린 공감 댓글을 소개합니다.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꿈, 역량, 잠재력을 키우는 게 진정한 교육 원칙. 정말 멋진 말씀이십니다."_ 사랑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공휴일 도심 내 주차가 대폭 허용돼
나들이가 즐거워졌습니다.

“국가 상징거리 이름 지어주세요”

국가 상징거리 홈페이지 8월 23일까지 접수… 총상금 1천7백만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화문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거리에 대해 국가 대표가로로서의 의미와 상징성을 담은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상징거리 홈페이지(www.nationalstreet.kr) 또는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23일까지다.

개인마다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명칭과 3백 자 이내의 제안 사유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당선작(1명) 3백만원, 우수상(3명) 1백만원, 장려상(6명) 50만원 등 총 1천7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작품은 도시 · 건축 · 문화 · 예술 ·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향후 당선작 등을 포함해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최종 국가 상징거리 명칭 선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선작 발표는 9월 1일, 시상식은 9월 15일 가질 예정이다.

▶ 참여방법

인터넷 접수_ 국가 상징거리 홈페이지(www.nationalstreet.kr)에 접속해 명칭 공모 신청서 접수.

우편 접수_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8호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국가 상징거리 명칭공모 담당팀. (우편 접수는 8월 19일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하며 응모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문의_ 02-538-5379

공감 퍼즐

빈칸에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8월 1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2. 남을 돕거나 시중을 드는 일. 봉사. “국민에게 OOO하는 정부”

4.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식.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쓴 용어. “생활공감정책과 규제개혁은 정책 OOOO시대의 필수 덕목이다.”

6. 빌려줌. “국민OO주택에 중증장애인 입주를 확대하고 있다.”

7.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생활공감 및 OO개혁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8.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OOO”

세로

1. 거리의 미관(美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2. 여름에 긴 낮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표준 시간보다 시각을 앞당기는 제도.

3. 자기 자신. 제 힘으로. “그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OOO 나서서 했다.”

5. 학비.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OOO을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OOO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7. 이산화규소와 물의 화합물. 물에 조금 녹으며 약산성을 띱니다.

〈Weekly 공감〉 22호(7월 29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기초학력 **4** 스타 **5** 금전 **7** 고조선 **9** 돌봄학교
세로 1 마이스터고 **2** 기숙 **3** 학자금 **6** 전원학교 **8** 선돌

당첨자

김현희(경북 안동시 태화동)
이재연(경기 여주군 점동면)
이효진(서울 동작구 대방동)
장은주(인천 부평구 부평동)
조정형(광주 북구 우산동)

광화문
장군이 지키고 대왕이 꽃 피운다

1

2

12·23분수 속을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하다.

6백 년 동안 수도 서울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거리가 시민이 자유롭게 거닐고 휴식을 취하는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길이 5백57미터, 폭 34미터로 조성된 광화문광장에는 '12척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12·23분수, 해치마당, 플라워카펫과 서울 5백 년 역사를 6백17개의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다.

특히 동쪽 역사물길에는 조선 건국 해인 13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역사가 음각으로 새겨져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를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게 했다. 서쪽 역사물길에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역사를 후세가 기록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둬 여운을 남겼다. 또 중앙광장에는 화려한 플라워카펫이 경탄을 자아낸다. 이 플라워카펫엔 한양 천도일부터 광장 개장일까지의 날짜를 모두 계산한 숫자인 22만4천 5백37송이의 꽃을 심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장 첫날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국가 상징가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5백 년 전통 위에 새 천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역동의 문화가 어우러진 광화문광장이 열린 공간으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1 2 밤이 되어도 광화문광장을 찾는 인파는 줄지 않는다.
3 조명을 받아 빛나는 강익중 씨의 작품 '광화문의 달'.
4 조선 건국부터 2008년까지 주요 사건들을 6백17개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인구 12억’ 인도시장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했다. 이로써 세계 2위의 인구대국, 12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인 인도와의 교역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8월 7일 서울에서 한·인도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6월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에 성공해 올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한 바 있다.

한·인도 CEPA 타결로 우리나라는 대(對)인도 수입 중 수입액 기준 90퍼센트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인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 중 85퍼센트에 대해 관세를 완전 철폐하게 된다. 표면상 인도의 관세철폐 비율이 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측이 얻는 관세 철폐나 인하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하다.

정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10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한·인도 CEPA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FTA 협상이 아닌 CEPA 협상을 택했던 인도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 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한·인도 CEPA는 최근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소비시장 잠재력이 막대한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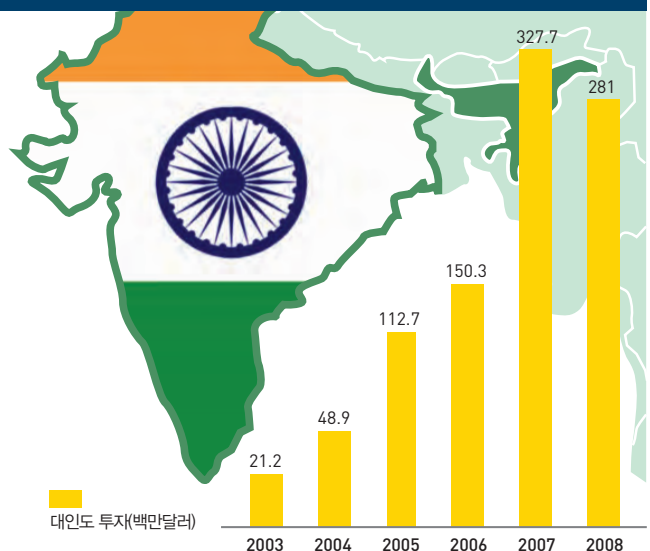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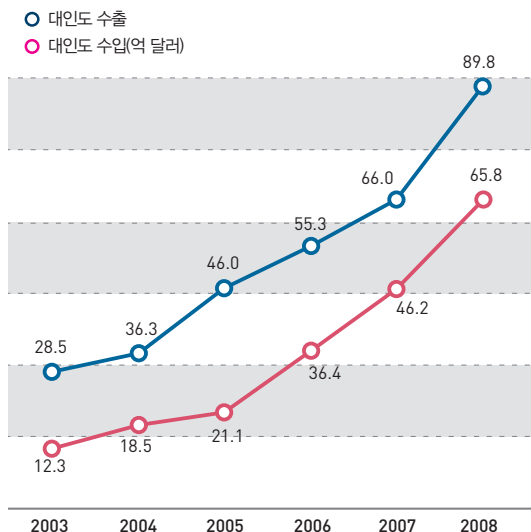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는 “인도경제는 19세기 중엽까지 중국과 함께 세계 총생산의 50퍼센트를 차지했던 경제대국이며, 최근에는 성장친화적인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7년 이후 연평균 약 8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관계 전반 포괄… 자유무역협정과 효과 동일

그는 “인도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연소득 4천5백 달러(약 5백50만원) 이상인 가정이 2002년 1천1백50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천1백90만 가구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는 수출과 내수 부문 모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현저한 ‘미래의 신화(Saga)’가 될 수 있는 ‘경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인도의 교역 규모는 1백55억6천만 달러

우리나라의 대인도 교역 및 투자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동아DB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8월 7일 한·인도 CEPA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로 2003년(40억8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6년 사이에 4배가량 급증했다. 더구나 인도는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대인도 중소기업 수출비중(33.4퍼센트)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비중(30.9퍼센트)을 앞지르고 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되는 품목에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가장 큰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항목이 자동차 부품이다. 지난해 대인도 수출액의 14.6퍼센트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1~5퍼센트로 낮아진다. 또 철강의 경우 5~12.5퍼센트이던 관세가 철폐되면 열연·냉연 강판을 중심으로 국산 강판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분야 역시 공작기계 관세가 즉시 관세철폐 항목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됐다. 현재 7.5퍼센트인 공작기계 관세는 향후 5~8년 사이에 사라진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백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투자보호 수준 높이고 전문인력 상호 진출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과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 밖에 컴퓨터 전문가나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CEPA를 타결한 첫 OECD 국가로 향후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 체결로 관세철폐 효과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희상 FTA 협상총괄과장은 "인도가 한국을 아시아의 우수한 경제발전 모델로 인식해 그동안 협상장 분위기는 서로 좋았다. 하지만 인도는 사회주의 정책의 뿌리가 깊은 데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장 개방이 이뤄진 나라다. 시장 개방 경험이 일천한 탓에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 협상 진행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인도와 CEPA를 타결한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여서 향후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와의 CEPA 서명으로 관세철폐 효과와 더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게 돼 향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22년 만의 부활 '서머타임제'

밝은 저녁 1시간 여유 얻는다

정부는 내년에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머타임제는 현재 전 세계 74개국이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천3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의 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DB

정부는 서머타임제로 절약한 한 시간을 국민들이 여가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머타임제 시행 국가

대륙	국가
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자치지역(가자지구, 서안지구)
유럽	유럽연합(EU) 25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터키 우크라이나, 바티칸시티,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바하마, 아이티, 온두라스, 버뮤다, 터크스앤드카이코스제도
남미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나미비아, 모리셔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1 "서머타임제가 시행되면 퇴근 후에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이가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직장에 다니느라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어 아무리 서둘러 귀가해도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와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경기 파주시 주부 장혜정 씨)

#2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니 서머타임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서머타임을 이용해 더 붙잡아두지만 않는다면 저녁 시간에 운동이나 공부 같은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신체리듬이 바뀌어 처음에는 애를 먹겠지만 곧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서울 회사원 박동현 씨)

서머타임제는 낮의 길이가 긴 여름 동안에 시곗 바늘을 1시간 앞당긴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서머타임의 개념은 1784년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양초를 아끼는 방안으로 일광시간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독일에서 연료를 절약하고 공습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를 처음 실시하면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현재 유럽연합(EU) 25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전 세계 74개국이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30개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서머타임은 대체로 매년 3월 마지막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캐나다는 매년 4월 첫째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주 일요일까지 실시한다. 미국은 2007년부터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난다. 이들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여가생활 활성화 등 서머타임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등화 시간 절약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절약한 한 시간을 여가생활에 쓸 수 있도록 되돌려준다는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하루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대신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짐으로써 전 국민이 밝은 저녁 한시간을 얻게 된다. 이를테면 7월 평균 일몰 시각인 저녁 7시 53분이 8시 53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밤 9시 무렵까지 밝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1951년, 1955~1960년에 서머타임제를 실시한 바 있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에도 이를 시행했으나 1989년 폐지했다. 내년에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22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가 서머타임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경기 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서머타임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 및 교통부문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서머타임제 도입에 드는 비용,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양식 변화,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 절감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천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서머타임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할 경우 연간 전력 소비량이 0.13~0.25퍼센트 감소해 3백41억~6백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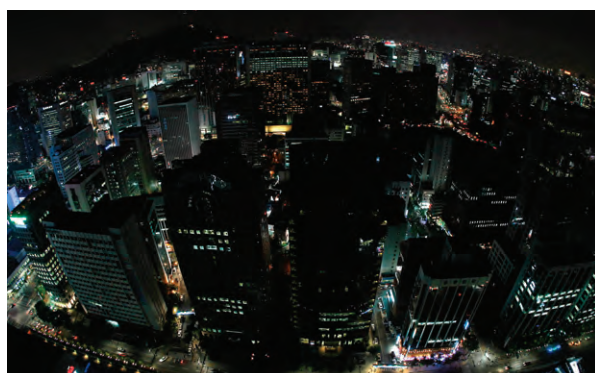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동시간 연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서머타임을 실시한 1987년과 88년도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도입 전과 비슷했다. 아울러 정상근로시간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통 부문에서도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고 교통사고가 줄어 연간 8백8억~9백1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전산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드는 2백억원 상당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1천3백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머타임제는 이와 함께 개인의 생활 패턴을 건강하고 발전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하루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대신 일몰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짐에 따라 전 국민이 밝은 저녁 한 시간을 얻게 된다.

서머타임제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민생활 수준을 선진국 형으로 높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P

벨로루시 민스크시의 기계 수리공이 도심 한복판에 걸려 있는 시계탑에 올라가 시곗바늘을 서머타임에 맞춰 한 시간 앞당기고 있다(위).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전력 소비량이 줄어 연간 수백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동아DB

정경택 기자

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성인 남녀 1천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중 50퍼센트 이상이 서머타임제 도입 후 "운동 및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극이나 영화 관람, 가족과의 친교활동, 공부나 학원 수강, 외식이나 회식 등을 늘리겠다고 답한 사람도 30퍼센트가 넘었다.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동시간 연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서머타임을 실시한 1987년과 88년도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별 총근로시간 패턴이 서머타임제 도입 전인 1985~1986년과 비슷했다. 아울러 정상근로시간도 월 1백75~2백 시간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지겠느냐"는 질문에 5백33명의 응답자 중 94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범죄 발생률도 연간 2.5퍼센트(지난해 기준 약 1만1천 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머타임제가 범죄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약 45퍼센트는 본인, 약 36퍼센트는 자녀의 밤거리 안전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 이창수 행정관은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해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협의로 근로시간 연장 방지

"이를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경제 및 노동계와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계기로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 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귀화인 첫 공기업 CEO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

"주한 외국인들이 관광한국의 자산"

귀화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기업 사장이 된 이참 사장은 "모든 세계인이 한국의 매력에 빠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관광산업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동아DB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국제회의와 전시,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출신으로 관광공사 사장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겁니다."

귀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기업 사장이 된 이참(55)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을 위해 남은 인생을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일이든 공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처럼 고위직에 임명돼서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관광의 문제점에 대해 이 사장은 한국은 매력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 정치적인 면은 알지언정 우리의 오랜 전통, 역사, 철학, 문화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관광자원의 가치를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광 선진국에 가보면 관광지마다 작은 부분도 이야깃거리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이 사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숙박·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에서는 경쟁국인 일본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에 처지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 중 관광산업 비중이 6.7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 잠재력과 비교할 때 관광산업의 위상이 다소 낮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시스템이 미비했고 지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홍보와 유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의, 인센티브 여행,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부터 국제기업이나 조직의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것. 또한 관광 홍보와 상품 개발에 외국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1백만 주한 외국인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한국관광 홍보대사들입니다. 코레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들을 위한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좋은 아이디어 등을 얻기 위해 학계, 경제계, 문화계 인사와 주한 외국인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관광서포터스'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밖에도 동계 레저와 해양관광, 고급 요양관광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의학을 활용한 '건강해지는 관광' '젊어지는 관광' '예뻐지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관광 강대국들은 국내관광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며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게 더 좋다고 할 만큼 인프라가 돼 있다면 외국 사람들은 절로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 경험이 없고 조직을 통솔하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행정 경험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며 "자신 있으니까 두고 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범정부적인 협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일이었던 만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범정부적인 협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일이었던 만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한식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는 인터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만큼 한국인으로서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는 듯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몇 차례 출연한 적이 있고, 언론에 자주 나와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인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한국인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는 이 사장은 "임명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며 "인생의 절반을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위해 살아왔는데 가끔은 '당신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는 왕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참 사장의 원래 이름은 베른하르트 크반트(Bernhard Quandt)로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1978년 우연히 한국에 들렀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눌러앉은 후 1986년 귀화했다. 귀화할 때 이름을 '한국의 도우미'라는 뜻에서 이한우라고 지었다가 '한국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 '참된 한국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참으로 개명했다.

그동안 주한독일문화원 강사, 한독상공회의소 이사, 참스마트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KTF 사외이사, 기아자동차 고문, 예일회계법인 고문 등 한국 기업을 돕는 일들을 해왔다. 1997년 〈나는 독일제 순한국인〉, 2000년 〈툭 터놓고 씹는 이야기〉, 2007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답답한 나라 한국〉 등 세 권의 책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KTV에서 '업그레이드 코리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식세계화추진단에서 활동해왔다.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이 사장은 한식의 관광 상품화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식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료가 가진 자연의 맛을 살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과학을 알리면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관광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경제력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신나게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 참으로 좋다는 이참 사장.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그가 한국관광공사의 수장으로서 한국 관광산업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기대해본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귀화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기업 사장이 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6월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영철 기자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세계 최초의 녹색성장 박람회 만들 것"

지구 표면의 71퍼센트를 차지하는 바다에 지구 생물의 90퍼센트가 서식한다. 바다는 산소의 75퍼센트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의 50퍼센트를 정화한다. 연안에서 60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에 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

바다를 주제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1천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수엑스포는 2012년 5월 12일부터 석 달간 전남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여수엑스포는 인간, 연안,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그린엑스포를 지향한다.

지난 6월 취임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은 "여수엑수포의 가장 큰 어젠다는 기후 보호가 될 것"이라며 "주제가 있고 질서가 있는 '현대판 난장'으로 행사를 꾸밀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작 면적의 3분의 1이 소실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문제이고,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할 현안입니다. 기후협약의 핵심이 바로 해양에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의 기후를 좌지우지하는 조절자입니다. 여수엑스포의 캐치프레이즈인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은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바다를, 그리고 지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수엑스포는 그린엑스포를 지향한다. 조직위는 세계적 관심사이면서 국정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여수신항 주변을 '해양 신녹색경제 연구기술 단지(Blue Ecopolis)'로 개발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21세기 신산업으로 떠오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의 메카로 이 일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88올림픽·2002월드컵·2012엑스포 비교 ＊자료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구 분	88올림픽	2002월드컵	2012엑스포
개최기간	16일	1개월	3개월
관람객	2백90만명	3백50만명	8백만명
생산유발 효과	4조7천억원	11조5천억원	12조3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34만명	35만명	7만9천명

여수엑스포 현장 단계 진입… 녹색기술 메카 발돋움

"병든 바다를 살려야 합니다. 숨 쉬는 바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람회에 사용될 전력의 20퍼센트를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는 박람회장의 에너지파크는 그 자체로 첨단 에너지 기술의 전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력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꾸릴 예정입니다. 박람회장은 녹색성장의 견본

도시로 기능할 겁니다.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여수시 전체를 녹색도시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도 했습니다."

8월 10일 열린 '2012여수엑스포 개최 1000일 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여수엑스포는 '계획단계'에서 '현장단계'로 진입했다.

"대전엑스포 때보다 준비 속도가 1년가량 빠릅니다. 1천 일 전 기념행사는 기공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시발점으로 박람회장 조성과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KTX, 고속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면서 하드웨어에 담을 콘텐츠를 세분화, 구체화할 것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는 박람회장의 에너지파크는 그 자체로 첨단 에너지 기술의 전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꾸릴 예정입니다. 박람회장은 녹색성장의 견본도시로 기능할 겁니다.

강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의 산파 구실을 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장 취임에 대해 "몹시 어려운 일을 맡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대는 높은 데 반해 여수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신나고 교육적인 콘텐츠 마련할 것"

"내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중국 상하이(上海)는 인구가 1천8백만명인데 여수는 30만명에 불과합니다. 상하이는 이동거리 1시간 이내에 1억명이 거주하는 반면 여수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이 국력을 집중한 상하이엑스포는 관람객 7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행사기간만 6개월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는 3개월 동안 8백만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KTX가 개통되면 서울~여수 이동시간이 3시간 남짓으로 줄지만 당일치기로 오가기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관객 1백만명은 마케팅이나 홍보로도 유치가 가능하지만 8백만명, 1천만명의 관객을 불러들이려면 신드롬, 즉 어떤 사회현상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강 위원장은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마련해야 여수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포는 첫째로 즐겁고 재밌어야 합니다. 재밌으려면 신나야 하고, 신나려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익해야 합니다. 관람을 마친 뒤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관람객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머리에 뭔가가 아른거리는 콘텐츠를 연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콘텐츠를 꾸리는 데 만전을 기울일 겁니다."

1백 개국을 여수엑스포에 참가시키는 게 조직위의 목표다. 현재 21개국이 참가를 확정했다.

"연말까지 50개국의 참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도 엑스포를 홍보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 목표는 55만명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여수신항으로 들어오는 페리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는 민자유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당초엔 아쿠아리움 콘도 엑스포타운만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관, 주제관, 국가관도 민간에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한국의 대표기업 10곳 정도를 유치해 기업관도 꾸릴 겁니다. 기업관은 민자유치가 아니라 기업이 엑스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민간기업이 참가해야 관람객의 호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는 끝으로 여수박람회가 여수만의 행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름만 여수엑스포지 남해안 전체가 참여하는 엑스포입니다. 아니, 전 국민이 주역으로 구실하는 엑스포가 돼야 합니다. 엑스포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력, 기술, 문화를 자랑하는 축제마당입니다. 국민의 역량과 열정을 '조직'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

글 · 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동아DB

여수세계박람회 최대 관람시설인 빅오(Big-O)의 아름다운 야경 조감도.

"재해 대책 이젠 송도에 물어보세요"

UN 첫 방재연수원 ISDR 사무소 출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인류의 안전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다.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 ISDR의 동북아사무소와 유엔 방재연수원이 인천 송도에 들어섬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안전리더로 도약하게 됐다.

유엔 ISDR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대규모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의 기후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연친화적 방재기반 구축, 지역별·부문별 재해위험 예측시스템 구축,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해 안전기술 개발, 방재산업 육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방재청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유엔 기구인 세계 자연재해 경감전략기구(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동북아사무소와 유엔 방재연수원 등 2개의 유엔 방재기구를 인천 송도에 유치, 8월 11일 문을 열었다. 유엔 ISDR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대규모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소방방재청은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 및 유엔 방재연수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ISDR 사무국과 논의를 시작했고, 2007년 12월 유엔 ISDR 사무국에 유엔기구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08년 3월 31일 유엔 ISDR 사무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 및 유엔 방재연수원이 2010년부터 공식 유엔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유엔 ISDR 지역사무소는 4곳에 설립돼 있다. 아메리카 지역

사무소가 파나마에, 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케냐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태국에,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다섯 번째 지역사무소가 설립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태국에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설립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대만 등 동북아시아를 별도로 아우르는 지역사무소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는 유엔의 재해경감 전략에 따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계활동을 통합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 공동예측 및 대응, 국가 방재기술 협력관계 구축, 취약요소 경감을 위한 예보·관측 기술 공유, 재해 관련 방재프로그램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DB

빠르게 녹고 있는 북극 빙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재해 공동예측 및 대응, 국가 방재기술 협력관계 구축, 취약요소 경감을 위한 예보·관측 기술 공유, 재해 관련 방재프로그램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엔 최초의 전문 방재교육훈련기관

유엔 최초의 전문 방재교육훈련기관인 유엔 방재연수원은 전 세계 지역별 방재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방재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재 표준모델 개발, 방재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엔 인증 자격 프로그램 운영,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기술 공유 및 재해 정보와 지식 교환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정근영 서기관은 "8월 11일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 및 유엔 방재연수원 개소식이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것을 출발점으로 향후 본격적인 방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내년 유엔 방재연수원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남아시아지역연합(SAARC) 8개국의 중견 간부 방재공무원 및 동북아 7개국과 중동지역 중견 간부 방재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세계의 다른 교육기관과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특수 지원 교육체제를 도입해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 및 실용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G

글·백경선 객원기자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안전국가 브랜드 확보… 국가경쟁력 높일 것"

동아DB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와 유엔 방재연수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는.

"유엔 ISDR 동북아사무소와 유엔 방재연수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우선 국내 재해예방 노하우가 강화됩니다. 방재 관련 기술과 정보, 지식이 집결되고 재가공·창출됨으로써 방재기술이 향상되고, 이로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국가 브랜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방재기술의 국외 전파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방재 관련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10월 제4차 재해위험 경감 아시아 각료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ISDR 동북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 개소식 준비 외에 소방방재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4차 재해위험 경감 아시아 각료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유엔이 주관하는 아시아지역 재해 경감전략을 논의하는 공식회의로서, 아시아 62개국 재난 관리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 8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 경감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하기 등 국민 각자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 유형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적 광고 마케팅 회사 WPP 대표 마틴 소렐

"한국의 큰 장점은 사람… 국가 브랜드와 연계해야"

세계적 광고 마케팅 회사인 영국 WPP그룹의 총수 마틴 소렐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라며 이를 국가 브랜드와 연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영국 WPP그룹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광고·마케팅 업계의 공룡이다. 12개 자회사를 중심으로 1백3개국에 1천4백여 개 사무소가 있고 직원이 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은 1백36억 달러. 알리안츠, 델, 포드, HSBC 등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백대 기업 중에서 3백45개사가 WPP의 고객이다.

마틴 소렐(Martin Sorrell · 65) 대표가 1985년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지금의 WPP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WPP의 원래 명칭은 엉뚱하게도 '와이어 앤드 플라스틱 프로덕츠(Wire and Plastic Products)'다. 당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철사와 플라스틱 바구니였다.

조선일보

마틴 소렐 회장은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는 경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인이다.

당시 마흔 살이던 소렐 대표는 광고회사 사치 앤 사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그만두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 모두가 잘 나가는 임원 자리를 박차고 창업에 나선 소렐의 '꿍꿍이'를 궁금해했다. 그는 2년 만에 충격적인 뉴스로 답을 대신했다. 1987년 소렐이 13배 규모의 광고회사 제이 월터 톰슨(JWT)을 인수한 것이다.

소렐은 WPP를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형 광고기업을 사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이후 그는 세계 광고·마케팅 업계에 보기 드문 성공신화를 쓰며 거인으로 성장했다. 1989년 오길비그룹을 8억6천4백만 달러에 사들였고, 1997년에는 조사업체인 마인드셰어를 인수했다. 2000년대도 영 앤 루비캠 그룹, 베를린 카메론 앤 파트너스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이 잇따랐다.

그는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철저하게 공격적으로 성공을 쟁취해왔다.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저평가된 기업을 산다. 그리고 경영을 호전시킨 뒤 그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적기에 또 다른 저평가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다.

40세에 뒤늦게 창업에 뛰어드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갱년기(male menopause)'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게 오히려 열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창업의 열정이 넘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창업자의 병(founder's disease)'을 앓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병' 이요?

네. 회사를 창업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때때로 '남자가 애를 낳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업에 문제가 닥쳤을 때 창업자의 처지는 매니저나 직원의 처지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걸 끝내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문제와 이슈가 제기됩니다. 전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평생 미디어를 상대로 사업을 해오셨는데, 향후 세계 미디어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미디어 간 장벽을 없애는 취지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한국도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다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배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REX

마틴 소렐 WPP 회장은 뉴미디어와 전통 매체 간의 융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미디어와 전통 매체 간의 융합이 더 많아질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 전통 매체들은 마치 '파리처럼(like flies)'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살해되고(killed)' 있습니다. 뉴미디어가 (정보 복사와 전달이 저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콘텐츠를 공급하니 전통 매체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NBC유니버설 최고경영자(CEO) 제프 주커가 지난해 쓴 표현을 인용해볼까요? '우리는 아날로그 달러(dollars)의 시대에서 디지털 페니(pennies)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매체의 역할을 뉴미디어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미디어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전통 매체의 콘텐츠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질이 높을까요? 정부나 국민은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뉴미디어가 정말 그들의 슬로건대로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Google does no evil)'고 믿는다면, 구글에 인터넷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허용하고 사람들은 공짜로 콘텐츠를 받아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나 국민을 대리한 정부는 미디어의 다양성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즉 기존 미디어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는 융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서양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시아도 비슷한 갈림길에 직면할 것입니다.

뉴미디어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뉴미디어 자체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perfect storm)으로 번질 겁니다.

한국도 최근 미디어 간 교차가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법을 개정했습니다.

미디어 간 장벽을 없애는 취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사실 한국도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다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배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국가 브랜드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군요.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 · 한국의 관광 슬로건)' 같은 한국의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다른 브랜드 슬로건을 제안해주실 수 있나요.

먼저 컨설팅 비용을 흥정해봅시다(웃음). 글로벌 캠페인 또는 지역 캠페인 슬로건을 만들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습니다. 그보다는 국가 브랜딩 캠페인이 대부분 본질적으로 조각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대략이라도 한국의 브랜드 슬로건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제 생각에 한국은 세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에 차 있는 사람들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 그리고 한정된 자연 자원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 과거의 어려움을 굳은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한국의 강점을 브랜드로 연결해 국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G

글 · 백승재(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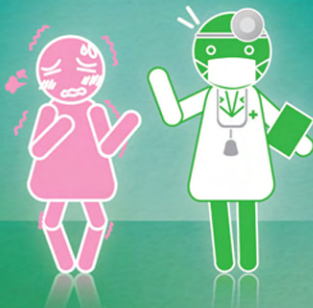



사진 · 정경택 기자

기 획 특 집

국민이 더 편한 세상 생활공감 OK!

'이사 간 곳으로 우편물이 배달되게 해달라', '여성전용 택시를 도입하자',
'아이들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알려달라'…. 국민들이 낸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정책이 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기초노령연금 신고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진입 장벽 완화…. 규제개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생활 구석구석을 보듬는 촘촘한 정책,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국민의 생활 속 지혜를 반영한 생활공감정책과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 먼저…"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찾아간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는 생활공감정책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다. 제품 생산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통닭집을 운영하는 이모(48) 씨는 지난 2월 49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종업원이 몸이 아파 쉬게 되자 대신 배달을 나섰다 적발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운전한 것인데 2년 동안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은 야속하다고 느껴졌다.

이 씨처럼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한순간의 실수나 위법행위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이런 사연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적지 않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힘차게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다"고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뜩이나 경제적 위기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서민들의 한순간의 잘못을 법적 잣대로만 처리할 경우 힘없는 서민들은 설 땅이 없어진다. 범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나 반성을 전제로 다시금 희망을 갖고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공감정책 '친서민 중도실용' 핵심 자리 잡아

이렇게 민생에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이 정부의 국민소통 및 친(親)서민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공감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정경택 기자

동아DB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핵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 부처 자체적으로 생활공감 과제를 찾아냈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출범시켰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를 연 것이다.

7월 28일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차관과 주부모니터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75건의 신규 생활공감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가능한 사업자 등록신청 제도 시행,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각 부처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낸 3천9백42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필요 없는 규제)"라며 "국민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규제개혁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높여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친서민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별도의 '생활공감기획단'을 설치했다.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 공모체계로 바꾸고,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만희 민간협력과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나 민원 등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부처이다 보니 그동안은 놓치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공감기획단이 처리를 전담해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깊이 검토하고 정책으로 숙성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중에는 번뜩이는 게 참 많습니다.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법령 개정도 필요 없이 조금만 손을 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 아이디어나 민원 등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부처이다 보니 그동안은 놓치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공감기획단이 처리를 전담해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깊이 검토하고 정책으로 숙성시켜나갈 것이다."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각종 국민편의시책, 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국무총리실 이승민 사무관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취약계층과 영세 기업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개혁과 생활공감은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큰 정책과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와 실생활이 어긋난 부분을 찾아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생활공감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민들은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 민생고를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생활공감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G

글 · 이혜련 기자

정경택 기자

"○○○어린이 학교 도착" 엄마에게 문자서비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생활공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그동안 추진을 완료한 1백50여 건의 생활공감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이마트 경기 남양주점에서는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에 따라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 학습지 교사인 이정애 씨는 국세청에서 보낸 반가운 우편물을 받았다. 초과 납부한 세금 18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환급금 통지서였다. 이 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별도로 환급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의 뜻밖의 '횡재'는 알고 보니 정부의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정책 덕분이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을 결정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만이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를 개선해 환급 신고 없이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덕에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1백39만명이 7백11억원을 돌려받는 혜택을 누렸다.

#2 혼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키우는 오수미 씨는 한동안 육아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오 씨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던 탓이다. 아이 혼자 밤늦게까지 지내다 보니 숙제는커녕 저녁식사도 잘 못했다. 오 씨는 TV를 보다 허기에 지쳐 잠든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그의 걱정도 자연스레 해결됐다.

초등보육교실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습 지원까지 해주는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종일돌봄교실은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보육교실의 연장으로 아이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초등보육교실(2008년 2천8백 개)과 종일돌봄교실(2009년 3백 개)을 내년에는 각각 3천1백 개, 6백 개로 늘리기로 했다.

#3 “마트에서 1회용 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니 아주 유용해요. 쇼핑한 물건을 1회용 봉투에 담아오면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더구나 마트에서 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쇼핑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리고 재질도 더 견고해요.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아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체 사용에 전국의 모든 마트가 동참하면 좋겠어요.”(경기 남양주시 홍지윤 씨)

정부는 올 초부터 마트에서 쓰는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반상회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쇼핑백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고 강도도 높였다. 현재는 이를 사용하는 마트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경택 기자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 지원까지 해주는 초등보육교실은 학부모의 교육비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생활공감정책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발굴해낸 생활공감 과제 2백15건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이미 추진을 완료한 정책은 1백51건에 달하며 올해 중에 50건, 내년에 14건이 해결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한 중점 과제는 77건.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아동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등 66건이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법률구조사업 강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등 10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정보 안내전화번호 일원화는 내년에 시행할 과제로 남겨뒀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해 87건 추진·47건 완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51건 중에서는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실현, 서민주택의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개선, 휴·폐업 자영업자 및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재외동포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영세 납세자 지원단 설치 등 38건이 해결됐다. 정기간행물 우편료 계약 일원화, 민영교통수단(버스) 이용 통합 복지카드 발급,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13건은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는 모두 87건의 과제를 추진해 47건을 완료했다.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신생아 예방접종 원스톱 서비스,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멘터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잠자는 보증금 및 예치금 찾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는 올 8월 중에 전국 40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친 경차택시와 여성전용택시 운행은 올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사 간 새 주소로 우편물 배달, e-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캐시백제 도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등 30건은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병·의원 중심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유실물 보관 및 소유권 취득 문제점 개선, 교통범칙금 납부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홍보1비서관실 정성기 행정관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공감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정경택 기자
동아DB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올 8월 중에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공무원 스스로 찾아낸 반짝 아이디어 75개

군대 간 아들 건강 인터넷으로 확인

'이것만 바뀌면 편리해질 텐데…' 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 정부가 75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빠르면 이달부터 당장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킬 대국민 생활공감정책을 살펴봤다.

일러스트 · 이우정

"하이패스의 도입으로 교통체증이나 불편은 많이 줄었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으로 5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말에 열린 제2회 생활공감 점검회의 때 나온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다. 생활공감 점검회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해 그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생활공감정책으로 만드는 자리였다.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찾아낸 3천9백42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 7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 과제들은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 서민의 민생고를 세심하게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등 75개 중점 과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이다.

각 부처별로 제안한 교육·문화, 경제, 사회·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의 과제들은 추진 절차에 따라 이달부터 201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중점 과제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한다.

교육·문화 분야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학교로 바로 지급

서울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김철수(가명·10) 군은 방학 중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또래 친구들은 피아노, 태권도 등 학원에 가지만 철수는 집안 형편상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졌다.

그동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난 해소 측면에만 집중돼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SK텔레콤, EBS교육방송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분야의 생활공감정책은 모두 7개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대아파트 아동·청소년 예술창작 지원 사업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문화공동체 조성, 관광사업 등록 수수료의 카드 납부 등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업료가 학부모에게 지급되다 보니 지원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국가가 지원한 수업료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 3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대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터링 제도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도 운영키로 했다.

동아DB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졸 이상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해 한국어 강의·교육 실습 등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저소득층 미성년 車사고 피해도 지원금 지급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순미(가명·17) 양은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있다. 하지만 생계 책임자인 성인 피해자 중심이어서 청소년 등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부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고 후에 피해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나 조부모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혜택 확대'처럼 경제 분

야 생활공감정책 20개 과제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국토해양부는 14개 도시에만 제공하고 있는 교통종합정보서비스(TAGO)를 오는 11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 카드 사용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는 주유를 할 때 정해진 화물복지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사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고, 카드를 여러 장 만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었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를 12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 편익을 위한 국세행정을 추구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나 농기업 등의 법률·세무·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농업인 교류센터와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동아DB

사회 · 안전 분야 여권 재발급 수수료 낮춰

전업주부인 주기도(가명 · 55) 씨의 아들은 4개월 전 강원도 전방으로 입대했다. 평소 병약한 아들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소식을 전해 듣기 힘들어 조만간 면회라도 가볼 생각이다.

그동안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에게 군 장병의 건강은 걱정거리였다. 전화통화로 간간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오지나 도서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거리가 멀어 가족의 걱정이 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7월부터 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원환자 조회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군 장병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 장병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 정보를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군 입대 아들의 건강상태 확인' 등 33개 과제가 추진되는 사회·안전 분야는 '국민 생활 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까지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여권 재발급 시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처리한 탓에 수수료가 높아 국민의 불만이 많았다. 여권 연장과 동일한 2만5천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자신의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형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볼 수 있는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를 내년 1월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와 참고인을 위한 전화진술 제도도 마련했다. 앞으로 전화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진술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사 관련자가 원하면 밤이나 주말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과 장소, 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3백65일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자동이체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을 건강도우미로 양성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등의 건강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언해주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공감 점검회의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해 생활공감정책으로 추진한다. 75개 중점 과제를 우선 선정해 국민생활 편의 도모,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동아DB

사회·복지 분야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해피콜 구축

세 자녀를 둔 민형식(가명·40) 씨는 석 달 전 다니던 식당을 그만둔 뒤 다른 식당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이곳저곳 다니며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와중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수급자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성실히 이행하면 고용지원센터가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구직활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시범 시행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실업인정제도 개선을 포함한 15개 과제로 이뤄진 사회복지 분야의 생활공감정책은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가족복지부는 2010년 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해피콜(Happy call)'을 구축키로 했다.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에서 전화해 실시간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등 실질적 복지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없이 12주간 실업을 인정하고, 노사협력 우수 사업장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표창장을 제공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잡한 노동 관계법과 노동행정의 궁금증을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풀어주는 서비스가 8월부터 도입돼 부정확한 정보가 판을 치는 인터넷에서 공인노무사들이 합법적이고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이다. G

글·김민지 기자

경찰청,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7·7·7 플랜 생계형 운전자엔 계도 위주 단속

"택시나 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치안활동의 초점을 '서민생활 보호'에 맞추고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을 내놓았다.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7·7·7 플랜'으로 불리는 이 대책은 서민을 위한 민생치안활동 강화, 서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활동 등 3개 분야별로 7개 과제씩 모두 2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활동에는 빈집털이, 영세 업소 갈취와 같은 고질적인 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 개선에는 영세 업소나 생계형 운전자가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를 할 때 단속보다 재발을 막도록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영세 서민의 교통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병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측정기기를 이용해 검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서민의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과 답답한 사항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주는 '24시간 민원콜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등 민원 업무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경찰관서마다 복지시설을 월 1회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111 사랑나눔운동'을 추진하고, 부상품이나 격려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 영세·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산물 구매가 활발해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윤환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희망울타리 프로젝트가 앞으로 서민생활을 한층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수첩 들고 다니며 생활공감 귀 기울여"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 정부가 쌍방향 소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프로슈머로서의 국민적 참여를 요구했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제1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올 2월엔 주부모니터단을 꾸렸다. 또한 공무원들에게서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생활공감정책'이란 용어를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공감정책이란 경제, 복지, 교육,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정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부모니터단 출범식(사진 위)이나 경남 합천 재래시장(아래) 등을 찾아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생활공감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제1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해당 부처 관련 전문가의 심사와 제도개선 절차 등을 거쳐 정책으로 시행되는데, 87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에 채택됐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준이 2퍼센트 내외였는데 생활공감정책의 경우 10퍼센트대로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와 쌍방향 정책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준 생활공감정책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가졌던 제1회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은 청년은 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 환승 정보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건의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대형마트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중증장애인을 먼저 입주토록 하는 제도' 등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관님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국민 아이디어 중 가장 공감했던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보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등하교 때 문자메시지 발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등 조금만 생각하면 편리해질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후 어디를 갈 때마다 수첩을 들고 다니며 국

민이 요구하는 바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문화·휴식시설과 이웃 간 만남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동네마당'을 제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인데 올해 11월까지 3백 평 내외 동네마당을 31개 시군구 35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신규 과제나 중점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지난 7월 말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부처 협의 후 2백5개 과제를 채택하고 그중 75개 과제를 생활공감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하는 전화진술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공감정책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상시적으로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8월은 에너지 절약, 9월은 내수경기 활성화 등 월별 주제에 따라 중점 공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 중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12월에 열리는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지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참여마당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도 자주 열어 정책 실행을 점검하고, 주부모니터단을 정부 서민정책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등하교 때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등 조금만 생각하면 편리해질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떠오르면 oklife.go.kr!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쯤 불편하다고 해서 바뀌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제안하자.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전, 생활공감정책회의, 주부모니터단 등 국민들의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소중히 듣는 창구가 열려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서민들에게 따스한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살림을 가장 잘 아는 주부들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 참여에 관심 많은 주부들을 모아 지난 2월 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출범시켰다. 전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시군구, 지역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3천41명의 주부 모니터 요원을 선발했다.

주부 모니터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직업군도 전업주부, 교사, 농업인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생활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부분들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적극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2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oklife.go.kr)로 들어가 참여하면 된다.

주부모니터단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 반영 호응

주부모니터단은 전용 커뮤니티, 워크숍, 지역별·분야별 소모임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 제안 4천3백여 건, 민원 제보 8백70건 등을 내놓았다. 또 정책소식 메일링 17만여 건, 정책 토론 7백 건 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주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 실효성이 있는 것들을 정책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왼손잡이를 위한 공산품 10퍼센트 제작 의무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휠체어 비치 의무화', '독립 가구주 아니어도 봉급생활 증명하면 청약통장 가입 가능'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활공감정책으로 반영됐다.

주부모니터단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 중 정책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는 TV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7월 25일 KBS 1TV 교양프로그램 〈5천만의 아이디어로〉에 나온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 탑재'가 바로 그 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구자일 주무관은 "방송 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고,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이 따라 하기 쉬운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간 활동하는 주부모니터단은 앞으로 매년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월 말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출범했다. 주부모니터단은 실생활에서 겪은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안해 정책화하고 있다.

운영될 예정인데, 2기 주부모니터단은 1기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모집한다.

좀 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적극적인 정책 제안자로 만들기 위한 제도도 있다. 먼저 '정책 프로슈머'로서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한 달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다.

총 7천3백20건의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접수된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제1회 생활공감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87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그중 47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시행됐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2010년까지 정책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다.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면 어느 것이나 제안할 수 있다. 제1회 때와 달리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등 월별 테마를 정해 특정 주제별 아이디어를 중점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한곳에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에 반영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oklife.go.kr)의 참여마당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중간결산 차원에서 9월 말과 11월 말에 각각 50개씩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에 시상식을 열어 우수 아이디어들을 시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만희 민간협력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모아 생활공감정책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라며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공감 정책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공감정책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공무원들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 이어 지난 7월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주부모니터단 등이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이번 제2회 점검회의를 위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회의 한 달 전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생활공감기획단 꾸려 대국민 메신저 역할 담당

그렇게 모은 3천여 개의 아이디어 중 2백5개가 점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메신저 피싱 예방 방안',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하는 전화 진술제', '지방세 전자납부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 75개를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로 선정해 정책 반영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백30개 과제는 부처 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생활공감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생활공감기획단'을 만들었다. 생활공감기획단은 각 부처에서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를 조속히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활공감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일융 행정사무관은 "공무원들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신규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평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아이디어가 쌓여 생활이 바뀌는 생활공감정책으로 국민이 더욱 살기 편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G

글 · 김민지 기자

'규제 전봇대' 583개 뽑아냈다

영구임대주택 저리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는 과연 얼마나 뽑혔을까. 정부가 없애겠다고 올해 발표한 규제는 총 1천1백67개. 그중 5백83개의 규제가 개혁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일러스트 · 이우정

#1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군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지난 학기 내내 속을 태웠다. 모두 세 번에 걸쳐 8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그는 낮밤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를 빼고 나면 월 4만원 이상의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가 벅찼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되면 다음 학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연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탈모증상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하지만 A군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대출받은 학자금 원리금 상환 때 연체가 되더라도 졸업 후 2년 안에만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해준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2 서울 노량진에 15년 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동안은 해당 요건(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안 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 B씨가 곧 공사에 들어간다. 지난 6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상가 리모델링 요건이 15년으로 단축된 데다 층수 증가 역시 허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조만간 2개 층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로 서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한 1천2개 과제에 1백65개를 추가해 총 1천1백67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할 핵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1백50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향후 2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방진아 사무관은 "항구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엔 부담스러운 규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유예 조치로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중지하거나 완화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8월 현재까지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총 5백83개가 완료됐다. 상반기 목표(6백73개) 대비 86.6퍼센트가 달성된 셈이다. 가장 많은 규제개혁이 달성된 분야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올해 해결된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자.

지난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또는 증설 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아울러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최종원 산업폐기물과장은 "기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은 가동률이 평균 50퍼센트 미만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신설 혹은 증설 때마다 매립시설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사업장 부담이 컸다.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쓰게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 경기 활성화 일조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분담금도 2년 동안 50퍼센트 감면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에 대한 제한도 풀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수의계약 불가로 투자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일 뻔했던 하남시 같은 경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내 지정 대상 관광사업도 그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등 7개 업종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했고 증축 범위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렸다. 층수 증가 역시 허용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대상은 1백74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규제개혁 대상은 1백52개가 완료됐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종전엔 6개월만 연체돼도 바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대출이 아예 불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연리 2퍼센트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두 달 걸리던 것을 1주일 안에 해결하도록 단축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최장 1년까지도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총 5백83개가 완료됐다. 가장 많은 규제개혁이 달성된 분야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로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 강화가 대표적이다. 납입 자본금 70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이 필요했던 기존의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청 최수규 창업벤처국장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도 한시적이지만 완화했다.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축소한 것. 그 결과 8백80개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환경성검토제 역시 간소화해 공장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전에는 1만 제곱미터의 작은 공장들만 간소화 보고가 가능했으나 이젠 3만 제곱미터의 공장도 가능하게 됐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고 운영 부담을 줄이는 규제개혁도 올 상반기에 1백52개가 진행됐다.

동아DB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가 된 대불공단의 전봇대.

올 상반기 기업규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대불공단의 전봇대 사례를 들며 '전봇대 뽑기'로 대변되는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서민정책 등 사소한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부터 토지 이용 및 공장 설립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 완화, 공기업 선진화 등의 굵직한 규제개혁까지 지속적이고 저돌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개혁은 감세정책과 함께 'MB노믹스'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렇게 규제개혁에 앞장선 결과 올 상반기에만 기업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2백80건이 완화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전국 기업들이 제기한 7백22건의 애로사항 중 입지, 환경, 안전 등 전 부분에 걸친 2백80건이 수용됐다.

이 자리에선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입지, 환경, 검사 및 환경 규제의 완화 등이 논의됐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 규제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감증명 5년 내 폐지 전자인증서로 대체

우리나라 국민 중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3천2백89만명. 한 해 평균 4천8백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은행 담보대출, 인허가 양도, 자동차 양도 등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적 거래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22개 중앙부처의 2백9종 사무를 볼 때도 인감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국민들이 인감을 제작하거나 발급하는 데 드는 시간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총 4천5백억원에 달한다.

비용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인감 사고는 모두 89건. 이 중 31건이 인간증명 위·변조 사고였다. 29건은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허위 위임장을 발급한 사고였고,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280건 완화

위·변조 사건의 위험은 물론 천문학적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는 인감제도가 바뀌고,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관리회사가 생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급한 경우도 22건이나 됐다.

모 영화사가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시달리다 얼마 전,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영화배우 S씨는 배우자가 본인 몰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였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전자인증서, 전자인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대체수단을 정착시킨 후에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한다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 사무가 60퍼센트 줄어든다. 중앙부처 2백9개 사무 중 1백25개 사무에서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래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저작권과 광업권의 이전, 질권 설정, 재개발사업 동의, 재건축조합 가입, 보상금과 환급금 등 수령,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인허가 대리인 자격 등의 사무는 신분증 사본이나 자필 서명, 위임장, 인허가 등록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 등 관공서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인증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굳이 기관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전자인증서로 자택이나 직장에서 누구나 부동산 등기, 은행 담보대출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대준 행정사무관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 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이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신분증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관리회사 육성해 지적재산 보호

삼성전자와 애플사는 모두 삼성전자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 MP3 플레이어를 만든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옙(Yepp)은 1백30달러에 판매되지만, 애플사의 아이팟(iPod)은 1백99달

일러스트 남동윤

동아DB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제한 조치로 가설건축물 증축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고양시의 한 중소기업 공장.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고충을 덜게 됐다.

러에 판매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현구 원장은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과 기술 등 지식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고, 이런 부가가치 창출 역량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난다"며 "삼성과 애플사는 우리의 미래가 지식재산과 기술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보고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은 선진국의 강화된 기술보호주의와 글로벌 특허 횡포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창의자본 구축과 최대 5천억원을 출자하는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2013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술이전 사업화 비중을 0.7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확충,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그것이다.

선진국에는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이미 활동 중인데 우리나라엔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많다. 이에 50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들인 뒤 이를 권리화하기 위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펀드 형태로 올해 설립하기로 했다. 창의자본이란 아이디어, 특허권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뜻한다.

선진국에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이런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 2백20여 개가 이미 활동 중인데 우리나라엔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많다. 이에 정부는 특허청 주관으로 50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이후에는 5년간 최대 5천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사업화 비중을 지난해 0.7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2010년 1월 국가재정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대형사업화 연계 예산 1백10억원을 신설하고, 2011년에는 1천9백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하고,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런 제도의 신설 및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는 해제됐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지재권 보호지수는 겨우 33위에 불과하다.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기업 족쇄 푸는 규제개혁 지속 실시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기업 애로사항 점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창원, 부산, 강릉, 부천, 대구 등 지역 간담회와 재생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과 물류수송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인접한 공장의 경우 적치장이나 가설건축물 설치도 힘든 상황이다. 경기 고양시 소재 S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장용지 내에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가 있어 물품 보관을 위한 가설건물 증축이 시급한데도 증축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공급에 필수시설인 지중배전용기기함(도시미관을 위해 전선을 지중에 매설할 때 남는 부분을 넣어두는 시설물)은 현행 규정상 보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12월 관련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하천수나 하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개선방안도 10월 중 발표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서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통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 그동안은 연구개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벤처기업은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가 그것이다(박스기사 참고).

유희상 국가경제위원회 규제개혁단장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규제 완화는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정지연 기자

동아DB

경기가 살아나려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개혁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 항공사진.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기업호민관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개혁 주력"

정경택 기자

지난 7월 23일 출범한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운영 중이다. '기업호민관'이란 로마시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호민관에서 따온 것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이다.

기업호민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최종 위촉한다. 초대 기업호민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민화 교수를 만났다.

규제에 막혀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국내의 기업 관련 전체 규제 가운데 70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5백50건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다. 게다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력이 부족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범정부적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변화는 아직은 미진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다. 중소기업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시스템을 갖춰 규제 개선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참이다.

초대 기업호민관으로서 비전과 중점 전략이 있다면.

최소 규모지만 최대 성과를 내는 기업호민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규제 개선 기관들과의 열린 네트워크인 '호민.net'와 기업인 시각에서 열린 규제 검색과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규제2.0'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해달라.

민원 제기 기업 등에 대한 비보복(Non-Retaliation)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민원 제기 이후 받는 불이익을 제거해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선순환 상생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소상공인, 공공구매, 창조기업 등 소기업 3대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민간위원장
"선별 규제하고 처벌은 엄격해야"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민간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과 규제를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법안들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은 전반적으로 규제를 맹신합니다. 규제에 의존해 행정을 펼쳐나가려 하고, 규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규제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난 6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는 규제개혁 대상 과제 2백80건이 확정됐다. 이들 중 1백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나머지 1백35건은 완전 폐지 되거나 완화가 결정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최병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기도 한 최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규제개혁의 전도사'로 불린다. 〈정부규제론〉〈규제의 역설〉 등 규제 관련 저서만도 여러 권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6월 다시 규제개혁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느껴온 법과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법과 규제를 현실에서 놓고 보면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현실과 따로 노는 법을 어기게 되고, 잠재적 범법자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대체로 책임의식은 매우 강하지만 그 책임의식이 '문서상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성과 효율성이 없는 규제로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입니다.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승복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권위가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선별해서 규

제하고, 그것을 어겼을 땐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규제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흔히 공무원 수를 줄이고 정부 조직과 씀씀이를 축소하는 게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론 맞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번 쌍용차 노사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각종 사회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정부 책임이죠. 정부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늉'에 그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음식점 60만~70만 곳을 제대로 단속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일손은 달리는데 정작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나날이 정부조직은 작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규제로 현실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보다 정부의 업무를 핵심 영역으로 축소하고 민간 부문은 민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시장성과 자율성이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와 경제는 어떤 관계인지요.

규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납니다.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비리가 만들어지고, 규제에 따르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규제순응비용)이 들어갑니다. 규제를 하는 쪽에선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에 규제를 남발하지만 이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조직들은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흔히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규제가 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상반기 규제 완화 중 어떤 부분이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 규제 유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승수 총리가 우리의 한시적 규제 유예를 홍보하자 '아주 강력한 경제 회생책'이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논의만 하면 잘할 수 있는 나라"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개혁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개혁'이란 말을 사용해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있고, 개혁 피로감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문장 역할을 할 테니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불필요한 규제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요.

올 하반기에는 규제 등록제를 내실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 1998년부터 각 부처가 우리 위원회에 규제 내용을 등록하도록 법제화됐으나 실제로는 등록이 안 된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가운데 '지원'이란 명목 속에 들어 있는 규제들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을 위해 갖가지 조건을 붙이다 보면 그것이 사실상 규제가 되고 엉뚱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거나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인천 '봉고차 모녀'의 경우처럼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들여다보면 수백수천 가지 유형이어서 방대한 업무가 되겠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는 동안 꼭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녹지나 산림보존지역에 자리한 영세 공장과 창고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을 올리는 등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책도 소비자가 결정 '프로슈머' 시대가 열렸다

민간 부문에서 진화해온 개념인 '프로슈머(Prosumer)'가 최근 공공 부문에도 도입돼 활성화되고 있다. 즉 정부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이 생산자(Producer)이자 소비자(Consumer)로 직접 참여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책 프로슈머들은 '국민 신문고' 시스템, 즉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까지 실용적이며 신선한(이른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책노선 아래 정책 프로슈머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책 프로슈머'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사실 '정책 프로슈머 시대의 도래'가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이미 각종 선거,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국민 의사의 제도화로 정부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렇다고 지금의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단지 '오래된 술을 새로운 병에 옮겨 담는 것'으로 여기기엔 뭔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정책 프로슈머의 활동이 기존 시민의 정책참여 형태와 비교해 차별화된 점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민 정책참여는 대체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결속력을 가진 이익단체를 통한 참여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현재의 정책 프로슈머들은 전문성을 지녔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다. 대개 개인적으로 '힘없는 시민들'이다. 이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기존의 시민 정책참여는 대체로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결속력을 가진 이익단체를 통한 참여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현재의 정책 프로슈머들은 전문성을 지녔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다. 대개 '힘없는 시민들'이다. 이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정책결정 시대가 활짝 문을 연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는 시민의 교육과 소득수준 향상, 인터넷 발전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한 것이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온 정부 개혁운동인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들 개혁운동은 정부의 독립적인 통치를 비판하고 정부와 시민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시장과 시민의 정책 참여 확산으로 정부의 시장이나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정책 프로슈머 시대의 도래는 정부가 시민(국민)을 정책을 만들고 소비하는 '고객(Customer)'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메커니즘'은 한 가지 잠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책임의식 고취를 저해하고 공공재와 서비스가 소수 개개인의 이기적 의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동체와 민주적 합의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제안 리사이클링(Recycling) 프로그램', 즉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성숙시키고 보완하는 점검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기우를 떨쳐주길 기대한다. G

글 · 김윤호(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동아DB

법제처가 생계형 음식점 창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서민의 창업 부담이 줄게 됐다.

채권 매입 없이 '그냥' 창업하세요

생계형 음식점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폐지

법제처는 분식점 등 생계형 음식점을 창업할 때 부담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서민의 창업 부담이 줄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48·서울 마포구 염리동)는 퇴직금 등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만 분식집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구체적인 창업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A씨는 "가게 규모가 33제곱미터(10평)를 넘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다. 조그만 분식집을 내는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 매입 비용도 30만원이나 됐다. 마침 A씨 옆에는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려는 B씨가 있었는데, 일반음식점은 채권 매입 비용이 15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았다. A씨는 "규모가 작은 분식집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법령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관련 법조문을 확인해보니 법에서는 면허와 허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돼 있었다. A씨는 "분식집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니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시행령(대통령령)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인 신고업종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업도 하기 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008년 11월 5일 이전까지 서울에서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15만원, 김밥집과 같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생계수단으로 음식점 창업에 나선 이들에게 이 같은 채권매입 의무는 불필요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법제처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 2008년 11월 5일부터 생계형 12개 업종의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했다. 이로써 분식집 등이 식품영업 신고를 할 때 지역에 따라 7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부담해야 했던 창업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채권 매입 의무 폐지로 연간 절감되는 창업 비용은 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창업한다는 점에서 서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셈이다.

법제처는 "생계형 음식점의 채권 매입 의무 폐지를 계기로 창업이 활성화돼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 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조영철 기자

대학생들의 학자금 걱정을 덜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내년 도입

1만여 명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 없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 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의 개념은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1학기부터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바꾼 제도다.

'학자금 안심대출'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새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가 운영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대학생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는 일을 근원적으로 없애준다.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며 분할 기간도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다.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 매월 이자를 갚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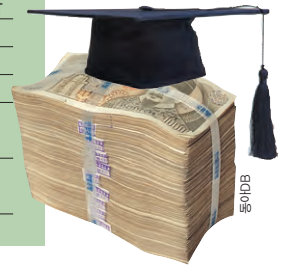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출 조건	거치 기간 : 최대 10년 (통상 5~6년)	거치 기간 : 소득 발생 전
	상환 기간 : 최대 10년 (통상 5~6년)	상환 기간 :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
대출 한도	4년간 4000만원	등록금 실소요액
거치 기간 이자 부담	소득 하위 1~3분위 : 무이자 4~5분위 : 1% 6~7분위 : 3.5% 8~10분위 : 5%	1~7분위 : 이자 납부 유예 8~10분위 : 5%
미취업 시 상환 의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	일정 소득 없으면 상환 유예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	없음
적용 대상	현 대학 재학생	2010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 (기존 대학생과 휴학생은 현 제도와 새 제도 중 선택)
대출 자격 제한	신용 9~10등급 학생 불가	제한 없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의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ICL) 비교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
도입 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관리 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 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공동 운영	연방교육부(FSA)
재원 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대출 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 금액	등록금	3000파운드 내 수업료,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회수 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 체계와 연계 안 함
상환 기간	10~12년(최장 25년)	–	평균 10.3년(2008)	최장 25년
회수 시점	일정 소득 발생 시 (국민소득 중앙치 $36,185)	기준소득 발생 시 (15,000파운드)	기준소득 발생 시 ($15,964)	재량소득 발생 시 (빈곤선의 150% 이상)
상환 능력 부재 시	상환 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 유예 (국가평균소득 85% 이하인 자)	상환 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동아DB

하거나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상환 기간이 도래한 원리금을 내지 못해 생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 사회문제가 돼왔다.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납부를 연체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백70명(2006년)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3천8백4명으로 급증했다.

새 제도는 사회생활 출발선상에 있는 대학생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30대 이후 자녀의 사교육비와 대학 학자금 부담이 연속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실제 부모 몫으로 남게 되면서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지난해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은 교육비가 13.8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외식비(13.7퍼센트), 식료품(13.7퍼센트), 교통비(12.4퍼센트), 주거비(9.3퍼센트) 순이었다.

'학자금 안심대출'은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는 일을 근원적으로 없애준다.

부모 세대 노후 대비 문제까지 해결 '일석이조'

또 새 제도는 스스로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해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 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제도'이지 '복지시책'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영하며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부터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한다.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 대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등록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를 대출해준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 기일이 왔는데도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외국 제도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소득 발생 시점과 연계하고 있으며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하고, 대출자의 소득을 찾아내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업무가 국세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 학자금 대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 체계와 연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지고 부모의 학자금 부담, 가난의 대물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전체 국민경제를 놓고 볼 때도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줄이며,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가능하게 해 국가의 노인층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학자금 안심대출의 모든 것

등록금 전액을 이자 부담 없이 취직 후 갚으세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대학생을 두었거나 '예비 대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학자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았다.

대학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라. 이것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1인당 대출 한도(4천만원)가 없어져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거치 기간이 늘고 거치 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 부담이 없고 상환 기간도 최장 25년으로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넷째,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 9~10등급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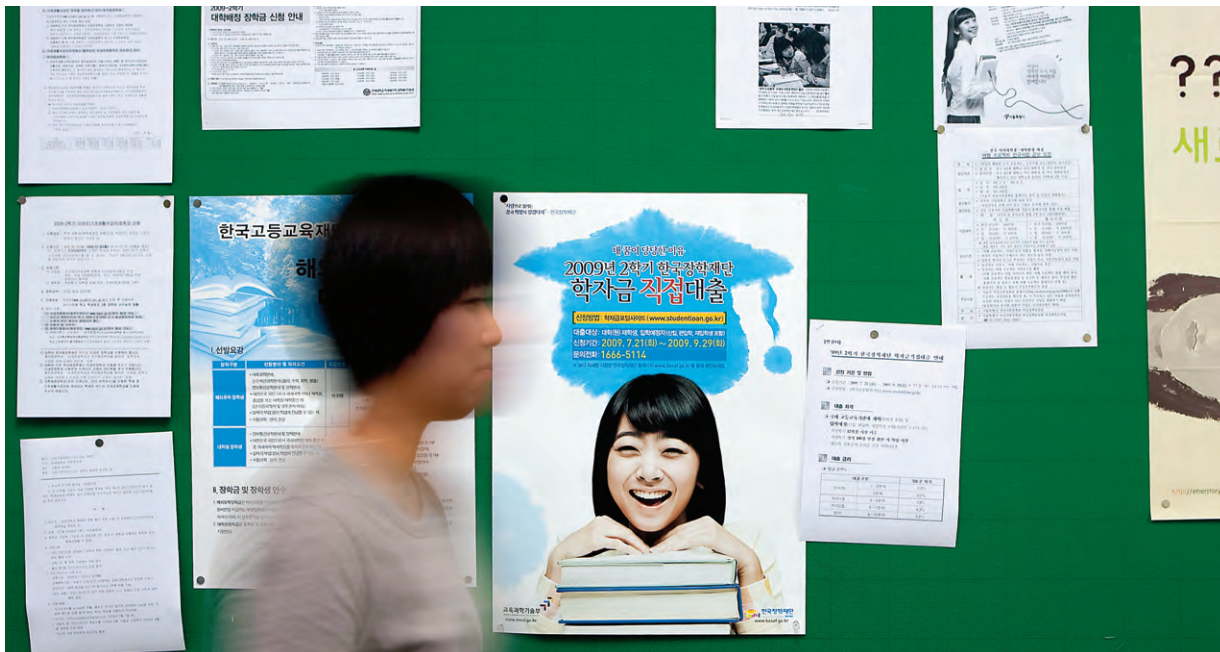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현행 제도와 변경된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리한 점이 각각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보조(연 4백50만원)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 무상지원 규모는 현행 제도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다른 장점이 많습니다.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 상환이 가능하며, 한도 없이 실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상환 도중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습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로선 정확한 재정 소요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새 제도가 획기적인 만큼 수요가 많아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학자금 제도 대출자가 현재 대출자인 40만명(전체 대학생의 20퍼센트)에서 1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2010~2014년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 예산은 43조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도 무상보조금 등으로 재정 부담(2009년 4천6백57억원)이 적지 않고, 2006년(1천2백4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4배가량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 제도로 생기는 재정 부담은 제도 시행 초기에 크게 늘어나겠지만 일정 기간 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수혜자인 학생 자신의 미래 소득능력에 따라 지원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현

나날이 늘어가는 대학 학자금은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지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큽니다.

개선된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자금 조달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동시에 대출받은 등록금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을 오히려 지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한 등록금 조달이 어려워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친중산층·서민 정책'입니다.

학자금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착하고 징수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여서 향후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 원천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을 조사해 상환받는 방법도 있으며 해외 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한 전업주부의 경우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 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보조금이 없는 새 제도 역시 'C학점' 이상입니다. 성적 기준을 높일 경우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어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이 지금보다 커집니다. 특히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C학점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선된 제도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어렵지만 지금도 저소득층 자녀, 긴급한 경제사정 때문에 학비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는 지원 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리금 상환 의무는 연간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 초임, 최저생계비,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연 1천5백96만원 이하입니다.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

정리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 하이브리드 車 예찬

“일반차보다 더 조용… 마음까지 안락해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내 첫 출시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준중형인 데다 배기량도 적어 기존 관용차보다 불편할 법도 하지만 이 장관은 환경을 위해 하이브리드 관용차를 애용한다. 이 장관이 직접 하이브리드 자동차 탑승 체험과 환경사랑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봄 가을이 짧아진 것도 꽤 오래된 일입니다. 요즘 오르락내리락하며 전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을 보고 있자니 비 피해로 고생하시는 주민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친환경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국내 최초로 출시된 친환경 자동차(현대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는 장관 전용차로, 다른 한 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력원인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연비가 우수하고, 동력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배기가스 저감에도 효과적인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를 장관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향해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중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로 타고 다니는 게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마침 이번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카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바로 주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7월 13일 차량을 전달받았으니 한 달 남짓 탄 셈입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타보니 안심하고 탈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전기모터로 엔진 시동을 걸게 되어 있는데 일반 차량보다 더 조용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차할 때는 자동으로 엔진이 정지돼 공회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가 줄어든다고 하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만의 장관은 관용차가 작아졌지만 실내 공간이 좁아 불편한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차량 계기판을 살펴보니 계기판에 경제운전을 알려주는 '에코가이드'가 설치돼 있더군요. 이것을 보고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친환경 운전도 하고,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유류나 LPG만 쓰는 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국민들의 세금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효자 중 효자인 셈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현재 인류는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선도하며 녹색성장의 실현에 기여할 국내 첫 하이브리드카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O_2 배출 기존 차 3분의 1 수준… 효자 중 효자예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킬로미터당 99그램으로 대형승용차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경차보다도 친환경적입니다. 연비 또한 동급의 가솔린 아반떼보다 좋습니다. 배출가스도 전 세계 배출가스 규제 중 가장 엄격하다는 캘리포니아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불고 있는 녹색바람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이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서 그린카 개발 경쟁을 선도하고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그린카 중 환경성과 상품성을 충족하며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유일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백1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혼잡통행료와 공용주차장의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하이브리드카로 바꾼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대형차 타다가 작은 차로 바꾸면 내부 공간이 좁아 불편할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중소형차를 많이 타보아서 그런지 실제로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으로 친환경 홍보대사 되어주세요

환경을 살리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자동차를 쉬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려는 승용차 요일제와 홀짝제, 카풀 등 많은 아이디어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꽉 들어찬 출근길에는 혼자 자동차를 끌고 가는 '나홀로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타인의 눈을 의식해 큰 차, 고급차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한 듯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줄리아 로버츠는 시상식장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나타날 정도로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에코 셀러브리티(Eco-Celebrity ·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며 환경운동에 힘쓰는 유명 인사)'입니다. 누구보다 남의 눈을 의식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환경을 위한 마음이 외모보다 더욱 멋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동차, 하이브리드카로 우리 스스로 친환경 홍보대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 개개인이 시작하는 저탄소 녹색생활이 대한민국의 푸른 꿈, 일류선진국가의 실현을 좀 더 앞당기리라 기대합니다. G

글 · 이만의 환경부 장관 / 사진 · 정경택 기자

인기 스타 100인과 함께 중소기업 살리기 나선 탤런트 **이덕화**

"중소기업 살리기 부탁해요~"

위축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급 연예인들이 대거 나섰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스타 100인과 함께하는 힘내라 중소기업 잔치 한마당'이 열린다.
이 행사를 주도한 한국영화배우협회 이덕화 이사장을 만났다.

"요즘 너나없이 힘든 시기지만 특히 힘든 게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팬들의 사랑으로 먹고사는 배우들이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만이라도 받아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덕화 이사장은 행사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마음만 받아달라"고 겸손해했다. 그러나 연예계 스타가 한두 명도 아니고 1백명이나 보수 없이 홍보대사로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개런티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번 행사의 관계자인 오치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수석위원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한 나라의 연예계 스타들이 조직적으로 뜻을 합쳐 불황 타개 캠페인에 나선 일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스타 연예인들의 '지원사격'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들은 자금압박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 아무리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도 홍보에 따로 돈을 쓸 여력이 없다. 이러한 때에 스타 100여 명이 무료로 홍보 활동에 나선 것은 현금 지원에 버금가는 큰 도움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 1대1 결연… 기업 홍보에 최선 다해

'스타 100인과 함께하는 힘내라 중소기업 잔치 한마당'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 배우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모집한 연예인 1백명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량 중소기업 1백 개 사의 제품 홍보와 판매를 돕는 행사다. 연예인들은 이미지와 나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한 곳씩과 1대 1로 결연을 했다. 결연을 한 연예인은 행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부스에서 제품과 기업 홍보는 물론 1일 판매원 활동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체적인 행사의 후원은 중소기업청이 맡았다.

"배우들도 개인 개인이 하나의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도 경기를 많이 탑니다. 요즘은 영화, 방송 모두 불황이라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스타급 배우들을 제외하곤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체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더 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데, 경제의 뿌리가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고 한국경제가 살아야 공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배우들 형편도 풀리니까요."

배우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우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만 60억원이 넘는다. 그만큼 배우들도 불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뭉쳐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게 배우들의 뜻이라고 이덕화 이사장은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엔 배우협회의 원로배우급 이사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끈다.

"배우협회 이사진 중엔 제가 막내입니다. 최고령인 신영균(82) 이사님을 비롯해 남궁원, 태현실 선생님 등 이사진이 모이면 제가 잔심부름을 해야 할 정도지요. 그런 분들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배우들 모두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덕화 이사장은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100인의 스타와 함께하는 힘내라 중소기업 잔치 한마당' 역시 영화인들의 축제와 중소기업인들의 잔치를 접목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주최 측의 복안이기도 하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참여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 수백 편을 초청하는 것은 영화제 규모를 키우는 데엔 효과적일지 몰라도 한국영화인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영화를 이끌어갈 감독 지망생들에게 1백만~2백만원씩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제대로 된 영화를 목숨 걸고 만드는 영화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실속 있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 역시 겉만 요란하고 규모만 부풀린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내년, 내후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 도움줘야…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

이 이사장은 어려운 기업인, 더 나아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 스타들이 직접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배우들은 팬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관객, 시청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내년엔 1백인의 스타와 중소기업이 아니라 매니지먼트회사까지 전폭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체 2백 곳, 3백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스타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스타들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관계. 이번 행사가 그 모범사례로 남아 이덕화 이사장의 바람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한국영화배우협회 이덕화 이사장을 비롯한 연예인 1백명이 1백 개 중소기업을 1대1로 후원한다.

상조업체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감독·규제 사각지대 피해 속출… 상조업체 규제 관련법 국회 계류

최근 몇 년 사이 상조업체가 급증하면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백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동아DB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상조업체 상당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시형(45)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전 가입한 상조회사에 전화했더니 업체가 잠적한 것이다. 이 씨는 빠듯한 살림에도 5년 동안 매월 꼬박꼬박 2만원씩 총 1백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상조서비스는커녕 그 돈을 찾을 수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신고는 2006년 8백33건에서 지난해 1천3백7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1백19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월 전국 2백81개 상조업체의 일반 현황과 재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 2곳 중 1곳은 파산 시 고객에게 납입금의 절반도 채 못 돌려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하는 곳도 47개(16.7퍼센트) 업체에 달했다. 파산 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납입금 비율, 즉 지급여력 비율이 1백 퍼센트 이상인 곳은 41개(14.6퍼센트) 업체에 그쳤다.

또한 회원수 1천명 미만인 곳이 1백31개(46.6퍼센트),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곳이 1백76개(62퍼센트), 총자산 3억원 미만인 곳이 1백49개(53퍼센트)로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했다.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곳은 11개(3.9퍼센트) 업체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외부감사 대상(자산 1백억원 이상)에서 벗어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38개 업체에 시정권고,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 과장광고 행위 등과 같이 불법을 저지른 38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 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 · 불법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결혼, 장례, 제사 등에 대비해 매월 2만~3만원씩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상조업체별 법 위반 실태(조치 내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용	위반 업체(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회사 연혁, 서비스 내용 등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경우	금호상조, 노블리아상조, 다음사랑, 동해상조, 미래연합상조, 삼성라인, 스카이뱅크상조, 온누리복지상조, 제이케이상조(각각 시정권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사업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결풍상조, 다음사랑, 다음세계, 다음세계상조, 디에이치상조, 조은이웃, 천궁실버라이프, 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각각 시정권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모던종합상조, 두레세상상조(각각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달구벌상조, 미래연합상조, 삼성드림이벤트, 삼성라인, 선경문화산업, 고려상조(각각 경고)
고객 환급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블리아상조, 동남상조, 아가페상조, 태화상조, 한빛상조(각각 경고)
다단계 판매영업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디에이치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부모사랑(각각 경찰 수사 의뢰)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면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 내용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풍상조, 디에이치상조, 선경상조, 조은이웃, 천궁실버라이프, 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각각 시정권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두레세상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모던종합상조, 스카이뱅크상조, 조흥, 한강라이프(각각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다음사랑, 보람상조프라임, 삼성상조, 선경문화산업, 현대종합상조(각각 경고)

주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상조회를 본떠 1982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등장했다. 상조회사는 별도의 자본금 규정 등이 없어 세무서에 법인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상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상조회사가 정부의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현재 상조업체 규제가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앞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구제 또는 분쟁 조정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문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02-3460-3000 / kca.go.kr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02-774-4154~5 / amco.or.kr

상조업체 가입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 확인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고객 납입금 규모보다 많은지, 고객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자산, 고객 납입금, 자본 등의 중요한 재무정보를 팸플릿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 파산 시 납입금 환불 보증장치 갖췄는지 확인

상조업체가 파산에 대비해 납입금을 환불해주거나 서비스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증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별도의 보증장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납입금 일부를 예치해두어 부분적으로나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납입금 일부 예치 업체 : 부산상조, 대구상조, 새부산상조, 보람상조, 아가페상조, 동남복지상조, 조은이웃, 좋은상조, 선경문화상조, 한일토탈상조, 대한상조, 현대종합상조, 에이스두레상조, 동아상조, 태화상조, 고려상조, 금강상조, CS라이프, 미래연합상조, 국민상조, 노블리아상조, 부모사랑 등 총 23개 업체

✓ 공정위 고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신고의 60퍼센트 이상이 상조업체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에 가입한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나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을 따르는 업체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납입금 중도 및 만기 환불 규정이 적법하게 돼 있는지 살핀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80퍼센트까지 환급해주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을 확인한다.

✓ 허위 · 과장광고 주의

상조업체들은 보증보험이나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부도나 폐업에도 안전하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고, 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

동아DB

채소도 산지에서 뿌리나 잎사귀에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묻어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식재료와 따로 담는 게 좋다.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장바구니도 손질하세요

식중독 위험이 높은 무더운 여름.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장보기부터 식재료 보관까지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주부 이희선(33) 씨는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와 함께 신문지도 몇 장 챙긴다. 물기가 흐르기 쉬운 육류나 어류를 신문지로 감싸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핏물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세균 번식의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을 보는 단계부터 이 씨가 지키는 식중독 예방 수칙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5월부터 8월이다. 그중에서도 8월은 식중독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달로 집계됐다.

8월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 중 원인균 1위는 장염비브리오균. 바닷물에 서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어패류, 생선회뿐 아니라 복합조미 수산식품(게장, 오징어무침 등)에서도 발견된다. 장염비브리오균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과 바이러스는 수십 가지나 된다.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과 강윤숙 연구관은 모든 식재료가 숙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생고기에 사는 자연 상태의 균들이 인체에 들어오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닭고기에는 캠필로박터균이 서식하기 쉽고요. 유기농 채소도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각종 기생충이 살아 있어 안심해선 안 되고, 오염된 흙에 사는 각종 세균들이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원인 1위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흔히 식중독 하면 집단 급식소나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 내 식중독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식중독 환자가 총 7천4백87명이었는데, 이 중 약 2퍼센트인 1백76명이 가정 내 발생 환자였다.

어떻게 하면 가정 내 식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여름철 안전한 장보기 요령'과 식중독예방관리과의 도움말을 통해 장보기 때부터 식품 보관 단계까지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냉동 · 냉장 보관용 식품은 맨 나중에 구입한다

슈퍼마켓의 떨이시간. 매운탕거리, 양념 낙지볶음 재료, 조개류 같은 해산물이 단골 떨이 식재료들이다. 급한 마음에 먼저

음식 재료는 밀폐용기 등에 나눠 담고 구입 날짜를 적어두면 위생적이다.

이런 해산물을 구입한 후 다른 물품들을 고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냉동고나 냉장고에 들어 있어야 할 식재료가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중독균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바로 조리해 먹어야 하는 육류, 어패류,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은 되도록 쇼핑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 1시간 안에 냉장고에 넣지 못할 경우에는 냉매가 들어 있는 휴대용 냉장용기를 준비해서 담아둔다.

고기나 생선은 신문지로 감싸고 채소는 따로 담는다

육류와 생선류는 비닐봉지에 넣어 신문지로 감싼 후 장바구니에 담는다. 육즙이나 핏물이 흘러나와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도 산지에서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오염돼 있기 쉬우므로 다른 식재료와 따로 담는다.

신선한 생선과 육류를 고른다

장염비브리오균의 대표적 원인 식품인 어패류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서 구입해야 한다. 생선은 눈과 아가미, 배의 상태가 신선한 것을 고른다. 랩으로 포장해놓은 경우 랩 안쪽에 서리가 보이는 냉동 어패류는 녹았다가 다시 언 것이므로 피한다.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할 수 있는 육류도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냉장고를 과신하지 말자

냉장실과 냉동실도 1백 퍼센트 믿을 게 못 된다. 식약청 강윤숙 연구관은 "섭씨 10도 이하 냉장실에서도 세균은 증식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죽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임신부의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나 패혈증의 원인균인 여시니아균은 섭씨 5도 이하에서도 증식하는 냉온성 세균이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식재료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냉장고에 넣어둘 경우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필요한 양만 구입해 되도록 빨리 조리해 먹는 것이 좋다. 잘게 간 쇠고기나 생선류는 냉장(섭씨 5도 이하) 보관 시 1, 2일이 적당하고, 냉동실(섭씨 영하 18도 이하)에 넣어둘 땐 1, 2개월 정도 보관해도 된다. 그러나 냉동실에서도 육류가 상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이내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1~3주 이내에 먹어야 한다.

또한 냉동 육류를 해동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하므로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동해야 할 때는 1회분씩 나눠서 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식재료를 담은 밀폐용기나 비닐봉지에 식재료 이름과 구입 날짜를 적어두면 편리하다.

올바른 도마 사용으로 교차 오염을 막는다

생고기나 어패류를 맨손으로 취급하면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침투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요리 준비를 한다. 육류나 생선을 조리한 도마와 칼, 싱크대는 바로 세제를 풀어 뜨거운 물로 씻어야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되도록이면 육류와 어패류용으로는 물기가 잘 스며들지 않는 플라스틱 도마, 과일과 채소용으로는 나무 도마를 따로 사용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조리하기 전에 손을 더운 물에 비누질해 씻는 것도 기본이다. 손을 찬물에 대강 씻으면 세균의 10~40퍼센트가 남아 있지만, 따뜻한 물에 손을 비벼 씻으면 세균의 90퍼센트가량이 없어진다. 냉장고 청소도 식품끼리의 교차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 선반을 떼어내 세제와 물로 깨끗이 씻고, 냉장고 내부도 젖은 행주로 닦은 다음 마른 행주로도 닦아내야 냉장고 내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포장재와 장바구니도 잘 손질한다

식재료가 신선해도 포장 재료가 유통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 병이나 캔 겉면과 포장 재료를 깨끗이 닦아 보관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비닐봉지에서 꺼내 밀폐용기나 청결한 비닐봉지에 넣어야 세균 오염과 산화를 막을 수 있다.

장바구니에 육류의 육즙이나 생선류의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으면 반드시 세제로 세탁해 햇볕에 바짝 말린 후 사용해야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 냉동 만두나 아이스크림처럼 꽁꽁 언 냉동식품의 포장지 겉면에서 물기가 흘러 장바구니가 젖었을 경우에도 장바구니를 뒤집어 말린 후 사용한다. G

글 · 최은숙 객원기자

안내 · 식약청 fm.kfda.go.kr

한국 여자축구팀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승

세계를 향해 슛~ 골인!

남자축구에 견줄 수 없는 비인기 종목, 얼마 되지 않는 등록선수로 매번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내는 양궁과 같은 '효녀 종목' 도 아니었던 한국 여자축구. 하지만 올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승으로 한국 여자축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당당하게 세계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겨뤄보겠다고 말이다.

"세계 수준 도달은 남자축구보다 여자축구가 훨씬 먼저 이룰 겁니다." 2007년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안익수(44) 감독은 2008년 초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여자팀이 남자팀보다 우승권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년부터 6년간 성남 일화 코치를 역임한 안 감독은 2006년 대교팀 감독에 부임하면서 여자축구에 입문했다. 2년여 만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 걸까?

그는 "걱정스레 맡은 여자축구팀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미국, 브라질, 독일 등 세계의 축구 강호들이 대거 참가한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결승에서 숙적 일본을 4대 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남자팀은 6위에 머물렀다.

안 감독이 2007년 말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에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세대교체' 였다. 지난해 5월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선수들을 20대 초반으로 물갈이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장 김유미(대교)가 당시 29세. 그간 대표팀의 맏언니로 팀을 이끌었던 유영실(33·대교)마저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안 감독은 "눈앞의 아시안컵이나 피스퀸컵이 목표가 아니다. 멀리 2010년, 2012년 있을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생각해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했다.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 앞으로 본선 진출, 나아가 한국 여자축구 발전의 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어린 선수들을 불러들인 안 감독은 훈련 방식도 바꿨다. 먼저 선수들의 '두려움' 부터 해결했다. 여자 선수들은 26~30세에 전성기를 맞지만, 그 시기 이들은 '이제 곧 은퇴할 텐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직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적절한 세대교체와 여성 친화 리더십

안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먼저 했다. 그는 "선수들은 국가관이나 프로로서의 마음가짐,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대교 시절에도 선수들에게 "훈련 외 시간에 제2의 인생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라. 영어도 배우고, 미용 등 새로운 공부를 하라. 비용은 지원하겠다. 머리를 기르고 화장도 해라.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동아DB

7월 1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FC파르티잔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우승한 우리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강조했다. 그간 '남성성'을 중요시한 지도자들에 비한다면 파격적인 일이다.

'막무가내식 훈련'도 탈피했다. 훈련 도중 전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경기 중 선수 개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훈련에 힘썼다. 안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전력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선수 판단으로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판단력과 인지력이 높아져 앞으로 지난번처럼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 맥없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해를 하니 움직임이 달라졌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가짐과 실력이라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믿음이 우승의 원천이 됐다"고 귀띔했다.

세대교체에 성공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숙제도 함께 받았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넓은 저변이 필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른바 '엘리트 여자축구' 선수들은 1천6백명 정도에 불과하다. 안 감독은 "미국의 경우 9백50만명, 독일과 일본은 3만명에 달한다. 저변을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일단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한국이 우승했다. 앞으로 이 같은 실력을 유지하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게 여자축구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한다.

외국 전지훈련을 다녀온 선수들은 외국의 인프라에도 부러움을 느낀다. 지난해 11월 미국 전지훈련을 다녀온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연습구장이 9개나 있는데 모두 여자 선수들이 연습하더라. 우리나라의 경우 유소년, 특히 여자팀의 경우 지원이 충분치 않다. 코치들도 많지 않아 골키퍼 등 특수 포지션 선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올해 한국여자축구연맹은 한국 여자축구 사상 최초의 실업리그인 'WK리그'를 출범시켰다. 그간 여자축구는 몇 개의 단기전을 치렀지만, 이제는 연중 리그에 참가하며 경기력을 유지한다.

오규상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은 "리그 출범이 인지도 상승 효과 등을 통해 여자축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에 비해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자축구 세계 랭킹이 현재 21위다. 5년 사이 26위에서 5단계나 상승했다. 우리 여자축구가 유럽이나 북미 등 여자축구 강팀들과 자주 경기를 갖는다면 랭킹은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 갈 길 먼 여자축구, 그래도 희망은 있다

남자축구 선수들처럼 해외 진출의 물꼬도 텄다. 대교 소속이던 박희영(24)과 차연희(23)는 올해 초 독일 분데스리가 1부 SC07 바드 노이에나르와 1년 2개월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진화와 정미정이 2005년과 2006년 일본 고베 아이낙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유럽 무대에 진출한 건 이들이 최초다. 이들의 해외 진출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됐다. 부산 상무 신귀영은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우리 팀 후배들도 '나도 열심히 하면 연봉도 높고, 수준 높은 리그에서 뛸 기회가 온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여자팀은 2010년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비롯해 4, 5개 대회에 참가한다. 여자축구 월드컵은 오는 2011년 독일에서, 올림픽은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안 감독의 목표는 '예선 통과는 물론 세계적 축구 수준에 걸맞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것이다. 그의 자신 있는 눈빛에서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을 읽었다면 과장일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축구의 발전은 '현재진행형'이다. G

글 · 온누리(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동아DB

여자축구 대표팀이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환영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확산

소외된 아이들 내 아이와 함께 살뜰히

한두 아이만 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기적인 자녀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돌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철수(가명·7)의 어머니 소냐는 필리핀 출신이다. 요즘 소냐는 아들 철수 때문에 걱정이다. 외국인 출신 엄마에게 정확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한 탓에 또래보다 말이 늦어지는 데다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서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언어발달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역시 엄마(혹은 아빠)가 일을 나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주위의 학부모들이 내 아이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살피면 충분히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마치 내 아이처럼 살뜰히 돌보는 학부모 동아리들이 여럿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동아리들에 힘을 실어주고, 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내 아이'가 우선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공동체정신 함양이 목적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학교 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동아리 활동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응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을 갖춘 동아리로 선발되면 3백만~5백만원(2009년 예산 16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단위 동아리, 시도교육청 접수·심사 후 지원금 지급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학교당 한 동아리 선정을 원칙으로 전국 3백40개 동아리에 지원할 계획이다. 단, 20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개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미 다른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동아리는 △학교 단위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언어장애 학부모와 자녀를 돕는 동아리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동아리 △학교 주변 안전 활동, 청소년 폭력 예방 등 교내외 공동보호 등에 솔선하는 동아리 등이다.

이 밖에 언어장애 학부모의 자녀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와 '함께 놀아주기' 등 아이들의 언어장애 예방 활동을 솔선하는 동아리와 등·하교길 '안전귀가 순찰단' 등의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 등도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팀 박영조 사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내 아이가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사업 의지를 밝혔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문의 · 학부모 정책팀 02-2100-6276

동아DB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별로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된 아이들을 도와주는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한다.

납량특집
4대강 살리기
제 17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야, 우리 이 나무 벌써 몇 번째 본 것 같지 않냐?
여태껏 같은 자리를 뱅뱅 돈 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
걱정 마. 나이테를 보면 남쪽을 알 수 있댔어.

으아아아아악!!!!
콰악!

침착하자, 침착.
우리가 헛것을 본 게야.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뻗은 쪽이 남쪽이라는데….
슥

으아악!!!!

북극성을 찾으면 돼!
그래! 먼저 큰곰자리부터!

쿠르릉!!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냐?
아니….
쏴아아아

이 답답한 인간들아!
으아아아악!!!!
스스스

너희는 유비쿼터스 단말기 되는 휴대전화도 안 갖고 다니니?
그거 이용하면 현재 자기 위치정보는 물론 4대강 유역의 다양한 여행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유비쿼터스 단말기 되는 휴대전화 갖고도 여태 헤맸구먼, 바보들….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 주문을 외워봐, 텐 · 텐 · 텐!

10 · 10 · 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

수지 웰치 지음 **배유정** 옮김–**북하우스** · 13,000원

결혼을 해야 할까
직장을 옮겨야 할까
사업에 투자를 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선택의 노하우를 들려준다.

15년 전쯤 개그맨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를 외치며 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씨처럼 양쪽 인생을 다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또한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속에서 과연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나 강박에 쫓겨 순간을 모면하는 결정을 해온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워킹맘 수지 웰치도 마찬가지였다. 승진의 기회를 가져다줄 해외출장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이 넷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혼자 출장을 갈까, 아이들을 위해 가지 말까를 고민하던 그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달리 출장은 순조롭지 못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아이들은 배탈과 고열에 시달렸고, 도착해서는 자외선 피부염으로 아파했다. 출장 마지막 날, 그가 VIP 고객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찾아와 "엄마~!" 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바람에 회의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10–10–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의 저자 수지 웰치가 199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일할 당시 경험한 실제 에피소드다. GE의 잭 웰치 전 회장 부인으로 유명하기도 한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할 상황에서 '10–10–10의 법칙'을 생각해냈다. 선택의 순간에서 지금 자신의 결정이 10분 후(바로 지금), 10개월 후(예측 가능한 미래), 10년 후(아주 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지금 당장과 먼훗날 동시에 생각하는 습관 길러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10년 후까지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다. 저자는 심리학, 진화생물학 등 최근 연구 성과를 거론하며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개의 변수와 시간대를 고려하는 데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10–10–10'이란 주문을 걸어 좀 더 큰 숲을 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저자는 자신의 습관, 다른 사람의 권유,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3단계 과정을 거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당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간결한 답을 낼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된 의문문을 만든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가' '아이에게 운동을 계속 시킬 것인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짧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다음은 정보 수집 단계다. 판단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거나 컴퓨터 차트를 이용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정리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10–10–10의 법칙'을 떠올리며 정보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선택이 10분 안에 끼칠 영향, 판단 결과들이 속속 도출되는 10개월 안에 끼칠 영향, 모든 결과가 최종 확정됐을 10년 후 모습을 떠올리며 필요한 정보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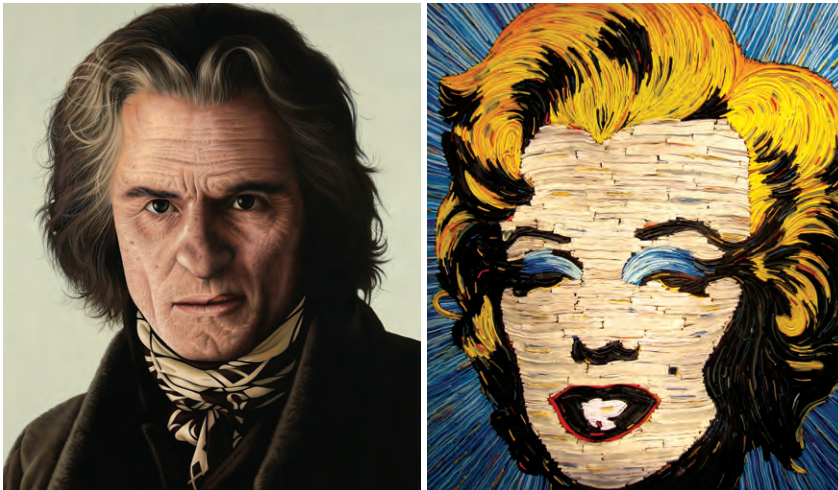
마지막은 비교 분석을 통한 최종 결정 단계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자신의 믿음, 목표, 욕구와 같은 가치관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10–10–10의 법칙'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결혼, 양육, 일, 인간관계 등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삶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삶을 끌고 가도록 만드는 '10–10–10의 법칙'을 지금 당장 실천해보자.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좋은 말씀

아무리 값진 글귀를 수없이 많이 읽고 외웠다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좋아질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법.
– 증일아함경

현대미술의 눈높이 맞추기…
미술관에서 만나는 슈퍼스타

2009 미술과 놀이전 '아트 인 슈퍼스타'

일시	8월 23일(일)까지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4전시실
관람료	성인 8천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 5천원
문의	02-580-1300 www.sac.or.kr

'미술과 놀이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전시는 예술의전당이 지난 2003년부터 마련한 대표적인 기획전으로, 지난 6년간 총 43만명의 관객이 찾았다. '현대미술은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고 '놀이'라는 대중적인 언어로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올해 주제는 '아트 인 슈퍼스타(Art in Super Star)'. 마릴린 먼로, 마돈나, 오드리 헵번, 제임스 딘 등 인기 대중스타는 물론 링컨, 케네디, 체 게바라, 간디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1백50여 점이 출품됐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현대 미술가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자연 속을 날아다니는 여름 벌레가 끈끈이에 붙어 초상화를 만드는가 하면 식탁에 올라야 할 토마토가 캔버스에서 그럴듯한 미술재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전깃줄을 이용해 비너스의 형상을 연출하고, 지우개 가루를 모아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도 만들어낸다.

명화를 패러디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반 고흐의 '초상화', 마티스의 '정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신윤복의 '미인도',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르누아르의 '소녀상',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을 재창조한 작품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느낌으로 관객에게 다가선다.

예술의전당 미술부 감윤조 부장은 "세계적인 스타, 정치인, 명화들이 국내외 작가들에 의해 어떻게 재탄생하는지 살펴보면서 미술품 감상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에는 강형구, 김동유, 김영석, 박영근, 씨킴(Ci Kim), 성동훈, 양문기, 유영운, 이길우, 이승오, 이종구, 이철희, 전신종, 조정화, 한상윤, 황재형, 데이비드 마크(David Mach), 기 크리스티앙(Guy Christian), 론 잉글리시(Ron English), 조우 차오(Zou Cao) 등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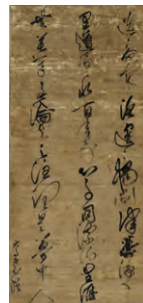
글 · 김지영 기자

완창판소리 '안숙선과 제자들'

일시	8월 15일(토)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2만원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안숙선 명창이 정화영, 김청만, 장종민, 조용수 등 제자들과 함께 춘향가 전 곡을 선보인다. 만정 김소희 선생에게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를 배운 안 명창은 이번 공연에서 김소희제 춘향가의 진수를 재현한다. 올해로 24주년을 맞는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그동안 2백여 명의 명창을 무대에 세웠다. 올해 공연은 12월 송순섭의 '동편제 수궁가'까지 모두 9회의 소리마당으로 펼쳐진다.

경북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선비, 그 이상과 실천'

일시	8월 31일(월)까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7시까지 (매주 화요일 휴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4-3153 www.nfm.go.kr

경북지역 정신문화의 면모를 유교문화와 선비문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다룬 전시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지정 보물 6점을 포함해 경북지역 총 21개 문중에서 출품한 유서 깊은 유물들을 한데 모았다. 이황 친필의 '조양문 · 이요문(朝陽門 · 二樂門)' 현판과 조선시대 4대 명필 중 한 명인 김구(金絿)의 글씨, 보물로 지정된 충재승무정원만인소, 충재일기, 청구여지도, 경상도지도(해동승람), 성학십도 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 마침내 언론 통폐합 29년의 낡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 방송과 통신, 신문 간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납니다.
-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정부

사용기간(2년) 제한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여러분 노동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내일을 위한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 생계가 걱정되신다구요? 실업 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 2년간 고용되었다면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무사실 및 기간 등이 확인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실직가정을 위해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연간 소득금액 5천만원 미만(이율3.4%)

■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다구요?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비어있는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의「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월 30만원씩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디딤돌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직업훈련이 필요하시다구요? 직업능력개발을 도와드립니다!

- 최고 2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해 드립니다
-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이율 3.4%)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바로 방문하십시오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1588-1919
www.molab.go.kr